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의 改正方向과 그 試案

柳 元 迪*

필자는 대학박물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법령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면서 이미 본지에 「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문화』 40·41 합집, 1992.12)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글도 그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것으로 필자와 본 협회는 여기에 게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부, 총무처, 문화재 관리국,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동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95년도 정부예산안에 각 국립대학별로 「박물관 지원비」의 예산을 계상시킨 바 있다.

— 편 집 자 —

현재 문화체육부의 양대 문화시설로 중요시 되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관리업무는 원래 문교부 소관이었으나, 60년대에 공보처가 신설되면서 박물관 업무가 분장되어 나갔고, 90년 벽두에 문화부가 개편신설되면서 도서관 업무도 이관되어 나갔다.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그 수장으로 임명된 학자출신의 이어령 장관은 학문과 교육을 통제의 대상으로 일삼아왔던 문교부의 악역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문화부를 문화진흥의 정책기구로 일신하려 하였다. 과거 문교부에서 제정되었던 「도서관법」과 「박물관법」을 과감히 폐기하고 「도서관 진흥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전면개정한 것도 그러한 의지의 발로였다.

그러나 1991.11.30 에 전면개정되어 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박물관의 핵심을 이루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의 핵심인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완전 배제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을 망라하여 민족문화를 크게 진흥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완전 상실된 일종의 「사립박물관 규제법」으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법의 전면개정 당시 문화체육부, 교육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법 개정의 주도권을 놓고 감정갈등 비슷한 분란이 야기되었던 데 기인한 바, 이는 부처이기주의의 극치로 관련기관 모두 지탄받아

* 木浦大學校 博物館長

야 마땅하다. 당시 새로이 개편되어 발족된 문화부에는 박물관과를 설치하면서 중앙부서로서 법 개정을 주도하려 하였으며, 지금까지 박물관의 정책수립과 총괄을 담당하여 왔던 국립중앙 박물관 측으로서는 박물관과의 설치가 새로운 상전의 등장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로서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학박물관이 포함된다는 것은 곧 대학박물관의 지도감독권을 문화체육부 장관이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학박물관을 제외토록 요청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8개월 전인 1991.3.24 에 개정 공포된 「도서관 진흥법」은 도서관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를 거쳐 가장 완벽한 법으로 탄생되었다. 이어 도서관 관계자들은 독서진흥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책을 읽는 국민의 기풍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운용을 보완하여 1994.3.24 동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재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동법에 대학박물관의 규정이 제외됨으로써 대학박물관의 예산과 연구인력 확충의 법적근거가 미흡하였던 점을 중시하고, 동법에 대학박물관 조항을 삽입하는 부분개정을 호소하여 왔다. 그러나 동법에 의한 법적 진흥책의 미흡은 대학박물관 뿐만 아니라 여타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당면한 현실문제였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부서에서도 동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는 상태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전면개정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굳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한 법의 테두리에 묶어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첫째, 동법이 만들어진 당시 미술관과 화랑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에 편승하여 급작스럽게 입법되었던 사정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박물관과 미술관의 주무부서가 다른데 따른 행정처리의 난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박물관은 문화체육부 생활문화국 박물관과의 소관이고, 미술관은 문화체육부 예술진흥국 예술진흥과 소관이며, 대학박물관은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정보과의 소관이다. 이들 3부서가 잘 협조한다면 몰라도 그간의 행정관행을 볼 때, 자칫 부처 이기주의의 침병으로 등장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진흥한다기보다 오히려 통제하는 복마전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묶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입법하였던 당시의 입법취지는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현재와 같이 동일한 법으로 묶어 이들을 국민의 문화시설로 진흥하려면 자칫 통제의 행정관행을 불러일으킬 주관부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부장관 하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본계획의 수립, 진흥책의 수립, 설치 및 운영, 기금의 운용, 예산의 기본 계획 등을 심의토록 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위상을 높여 이들 기관에서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의 일반행정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리하여 「박물관 진흥법」과 「미술관 진흥법」으로 입법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으나, 이는 국가 법령체계의 공연한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법 체계가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혹자는 「박물관 진흥법」으로 하되, 미술관을 박물관에 준하여 규정

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많은 미술관이 소장관리하는 자료가 실은 박물관의 유물과 대차 없다는 점에어서이다. 그러나 위 두 가지의 주장은 박물관 위주의 극단적인 편견으로, 현실을 타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필자는 위와 같은 개선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함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전면개정의 방향설정은 많은 전문가의 검증은 거쳐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현실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는 입법취지와 입법과정의 유사하였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주목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던 바, 이에 개정시안을 만들면서 동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법 조문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총칙,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문고, 도서관협력망, 독서진흥 등의 8개 장에 전문 54개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는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도 이와 체계를 같이 하여 총칙,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설립과 등록, 관리운영, 지도와 감독, 자문협력기구 등의 9개 부문으로 편장되어, 필요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규정되어 법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 법 체계에 수용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의 핵심을 이루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의 핵심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등으로 편목을 분장하여 설립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위상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전혀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문화체육부 직제」의 한 모퉁이에 규정되어 있는 데도, 타 법령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된 조항이 많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관계자들은 「문화체육부 직제」가 대통령령이어서 법령의 설치근거가 없어도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지만, 「직제령」과 「설치령」에 의한 위상의 차이를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중앙 각 부처의 직제는 중앙 본부의 직할 하부조직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결코 문화체육부 장관의 직할 하부조직이 아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소관하는 독립기구인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질서와 위상이 법령체계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그들이 기껏 직할 하부조직을 규정하는 「직제령」에 만족하고 있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서의 위치를 그들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체육부 안에서의 규모나 위상으로 보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맞게 이 법에 의하여

위상이 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설치령」과 「국립현대미술관 설치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인으로서 학예사(큐레이터)의 양성과 자격제 및 이들을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예사는 국가공무원 별정연구직으로서의 임용직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증 소자자로서의 큐레이터는 결코 아니다. 학예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박물관학 전공자는 실제 없는 바, 박물관학은 관련학과에서 강좌로 개설한 수많은 교과목 중의 하나이지 결코 학문으로서의 전공영역이 아니다. 현재 학예연구사는 7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유사한 국사, 국민윤리, 국어, 영어, 수학 등의 5과목과 선택 2과목의 제한경쟁시험으로 채용하고 이들 공무원 신분을 큐레이터라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큐레이터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직종에서 전문직이 되기 위하여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서 소정의 실습교육을 받고, 유무시험의 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케 하고 있으며, 이들 자격증을 가진 자를 전문직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다. 직종에 따른 자격증의 부여 절차는 소관부처에 따라 별개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증은 대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교직은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로, 사서직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기술직은 기술사, 기사, 기사보로, 간호직은 1급간호사, 2급간호사, 간호사보로 되어 있는 바, 학예사도 이에 준용하여 1급학예사, 2급학예사, 준학예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종래 학예직 공무원은 주로 사학과에서 배출되었으나, 80년대 이후 고고학과, 인류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등 40여개 대학에서 분야별 전공인력이 많이 나오고, 여타 예술계와 자연계학과에서도 학예직에 진출하며, 전문대학에도 박물관과가 개설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은 실제 전문행정직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문화정책, 예술정책, 역사자료, 고고미술자료, 민속자료, 예술자료, 자연사자료, 산업사자료 등을 담당취급하는 바, 학예사 자격도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역사민속, 고고미술사, 자연산업사, 문화예술의 4개 분야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서관 사서직은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로 단일화 되어 있으나, 이들 다양한 전공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몇 개 분야의 자격증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예사 자격증은 해당 전문학과에서 관련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사서직에서는 30학점임) 취득한 자로 지정기관(등록된 대학박물관과 미술관 포함)에서 실무실습을 거쳐(교생실습, 간호실습, 사서실습과 같이), 국가자격시험을 치뤄 2급학예사를 취득케 하며, 2급학예사 자격취득이 최고의 영예가 되도록 시험과 임용의 권위를 높인다. 국가자격시험은 2~3개의 공통과목과 계열별로 4~5개의 계열과목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A⁺, A⁰) 이수한 시험과목은 면제하도록 하며, 자격증에는 교사자격증과 같이 계열분야를 기재하여 필요한 직종에 임용토록 한다.

공 통 과 목	역사민속분야	고고미술사분야	자연산업사분야	문화예술분야
박 물 관 학	향토사연구법	선 사 고 고 학	자연과학개론	문 화 정 책
한 국 문 화 사	한 국 서 지 학	한 국 고 고 학	과 학 사	예 술 론
보 존 과 학	한 국 민 속 학	한 국 미 술 사	산 업 기 술 사	공 연 예 술 론
	?	?	?	?
	?	?	?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2급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학예사를 주고,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예직 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2급학예사로서 학예직중 경력 9년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친 자에게는 1급학예사를 준다. 전문대학에서 박물관관계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준학예사 자격증을 주는데, 전문직 경력과 교과에 따라 자격연수(자격연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맡음)를 거쳐 상위 자격증으로 갱신토록 하며, 이의 규정은 사서직을 참조하여 법제화 한다.

자격제로서의 학예사는 전문직으로의 임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중앙 행정부처와 시도구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및 문화재를 담당하는 행정 전문직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토록 하여야 한다. 각종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물론, 항만공항의 문화재 감정평가사, 그리고 각 행정단위 지역의 문화회관 등에는 전문직으로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용토록 한다. 최근 들어 각 시구군에 거액을 들여 경쟁적으로 지어 놓은 문예회관은 준공 후 전문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바, 여기에 전문 학예직이 배정되어 이들에 의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예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지역 문화센터로 자리잡아질 것이다. 전문직으로 학예연구관은 1급학예사에서, 학예연구사는 2급학예사에서, 학예사보는 준학예사에서 임용토록 공무원 임용 규정을 정비한다.

다섯째, 대학박물관이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에는 박물관을 국립대학은 두어야 하는 부속시설로 사립대학에는 둘 수 있는 기구로 되어 있을 뿐 설치기준과 지원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바, 국공사립대학의 대학박물관(사관학교 박물관 포함)을 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이에 의하여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이 만들어져 예산과 학예직의 확충이 이뤄지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개혁작업과 관련하여 동 설치령의 제정은 시급한 현실문제로 제기된다.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학교 설치령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은 이들 설치령의 개폐에 따라 그 존폐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예산 및 인력의 자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속시설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총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지원시설에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정부에서 위임하기 때문에 자칫 대학박물관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가민족의 문화유산과 국가 매장문화재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대학박물관이 소기의 설립목적에 다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교육관계법보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대학박물관이 규정되고 이에 의하여 「대

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박물관은 교육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문화 하되, 명실상 부한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학도서관과 같이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간판만 건 부실한 대학박물관 때문에 대학박물관 전체가 도맷금으로 오명을 받는 일 없도록 자체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대학박물관도 매장문화재 위탁보관 시설을 훌륭하게 갖추면 교육부장관을 통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 등록하여 매장문화재를 담당하게 보관토록 한다.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을 병립시킴으로 국가적으로 예산만 낭비한다고 대학 외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대학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시설이나 전문직도 확보하지 않은 채, 발굴용역에 참여하거나 보직을 위한 위인설관적 설치로 그만큼 불신을 조장하여 왔다는 세인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대학박물관 협회를 법인으로 하고 여기에 학술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술기관으로의 품격과 위치를 견지하도록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으로서 구체적인 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전면개정에서 진흥책으로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기부하거나 유물을 기증한 뜻있는 인사에게 응분의 사회적문화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해방이후 민족문화의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무하였던 시절에도 뜻있는 인사들은 가산을 탕진하여 가면서 해외로 반출되었을 뻔한 많은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왔다. 여기에는 대학박물관의 역할도 컸다. 그분들이 연로함에 따라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들이 국공사립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로 영구적 기증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지각한 행정관서와 사리사욕에 눈 먼 졸부들에 의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작태가 속출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자료의 기증이나 기금의 기부자에 대하여는 응분의 명예 현창책을 마련하여, 독지가들이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증기부자의 숭고한 문화정신이 현양될 수 있도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유물의 항구적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② 미술관과 자연사 및 산업과 관련된 전문박물관이 많이 건립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수한 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는 세금감면과 공과금 지원 및 문화훈장의 포상 등으로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③ 국가 매장문화재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매장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맡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상위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차제에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한다. 국가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매장문화재는 거의가 토목건

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학박물관이 긴급발굴한 유물이다. 이들 매장문화재는 골동품적인 큰 가치는 없으나, 출토지출토시기발견자 등이 확실하여 우리나라 선사시대 또는 고대문화를 규명하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 ④ 덧붙여 국가 매장문화재의 위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상 구제발굴은 대부분 대학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수습된 유물은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게서 보관관리를 위탁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이 매장문화재를 완벽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매장문화재는 발굴과 함께 곧 항구적인 보존처리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도, 국가소유의 위탁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비와 보관비용 등이 「매장문화재 위탁관리 협약」이라는 불평등 협약에 의하여 모두 대학박물관에 떠맡기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매장문화재를 위탁보관하는 기관은 대학박물관이라 할지라도 매장문화재를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만 위탁하며, 위탁보관에 따른 보존처리비와 보관비용 등도 정부예산에 계상되도록 법령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예산에의 계상이 어려우면 유물의 보존처리와 보관을 위하여 발굴용역비의 10%를 유물비로 계상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 ⑤ 국가 매장문화재의 관리와 위탁보관에 관련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학술사업은 대학박물관이라 할 지라도 등록된 박물관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조사발굴의 학술용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설립운영주체가 다양한 박물관이 많이 생겨나고 대학박물관의 난립된 형세를 방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 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정부 출연 및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지원, 시설 및 자료의 확충, 학예직원의 자질향상, 매장문화재의 관리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이 기금의 설립은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거쳐야 하는 난관이 있지만, 관계 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 ⑦ 마지막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타 문화시설(도서관, 문화원, 향토사학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설립목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 이의 규정도 삼입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바를 유념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전면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의 상충과 용어사용이 어색한 점이 많으리라 본다. 이 시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박물관 종사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한 토의를 거치면(가능하다면 공청회도 수차례 가지면서) 보다 완벽한 법이 성안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어디까지나 시안이기에 때문에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시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도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법

시안	참조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도진법 제1장 '총칙' # 법 제1조</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으로서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p># 법 제2조</p>
<p>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p>② 박물관은 박물관자료의 취급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박물관 : 서로 다른 2개 분야 이상의 박물관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 2. 전문박물관 : 역사·과학·산업·민속 및 향토사료 등 특수분야의 박물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 <p>③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①항 각호를 준용한다.</p>	<p># 법 제3조</p> <p># 법 제4조</p>
<p>제4조 (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전시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p># 법 제5조</p>

<p>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답사 등의 개최</p> <p>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p> <p>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과 정보 및 학예인력의 연수·교환 등 유기적인 협력</p> <p>7.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미술관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중·“박물관자료”는 이를·“미술관자료”로 보며, 제7호중·“박물관”은·“미술관”으로 본다.</p>	
<p>제5조 (이용제공) 박물관 및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 도진법 제4조 '박물관대학' 등</p>
<p>제6조 (시설·자료)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보존·정리·전시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업무에 적합한 학예직원·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류별 학예직원·자료·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도진법 제5조</p>
<p>제7조 (학예직) ①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정리·전시·연구·평가·관리하는 전문직으로 학예사(큐레이터)를 둔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직은 1급학예사, 2급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예직원의 연수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 도진법 제6조 1</p> <p># 도진법 제6조</p>
<p>제8조 (학예직의 임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장은 학예직으로 보한다.</p> <p>②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학예연구실을 두며, 학예연구원은 학예직으로 보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및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직과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전문직원은 학예직으로 보한다.</p>	<p># 도진법 24조 1</p> <p>* 공무원 임용령 개정</p>
<p>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기금) ① 정부는 도서관 및 미술관의 설립지원, 시설 및 자료의 확충, 학예직원의 자질향상 및 연구, 기타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기금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p># 도진법 제9조</p> <p>*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p>

<p>제10조 (금전·재산의 기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설치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p>	<p># 법 제25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p> <p>제11조 (국립중앙박물관) ①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국립중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 도진법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 # 도진법 제15조 → '국립중앙박물관 설치령'</p>
<p>제12조 (업무) ①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제4조의 ①항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그 정책의 수립을 행한다. 1. 국내 박물관자료의 체계적 관리 2. 국가 문화재의 관리 3. 전산화를 통한 박물관자료 및 박물관협력망의 총괄 4. 학예직의 각종 연수 5. 박물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6. 다른 박물관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7. 박물관 협력망의 조직과 구성 8. 기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p>	<p># 도진법 16조 1</p>
<p>제13조 (매장문화재의 관리) ①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 매장문화재를 관리한다. ②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국가 매장문화재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1, 2</p>
<p>제14조 (국립현대미술관) ①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 국립현대미술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 '국립현대미술관 설치령'</p>
<p>제15조 (업무) ①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제4조의 ②항 사업 외에 제11조 제①항의 각 호의 업무 및 그 정책의 수립을 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p> <p>제16조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보존·전시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 도진법 제3장 '공공도서관' # 도진법 제21조</p>

제17조 (운영)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은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도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진법 제22조
제18조 (법규)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치와 운영 및 관람료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 제12조 2
제 4 장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제19조 (설립)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 ①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이 법의 목적과 공익정신으로 설립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에 따른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도진법 제3장 '공공도서관' * 신속대응책
제21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학박물관	
제22조 (설립) ①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시설로서 대학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도진법 제4장 '대학도서관' # 법 제4조 → '대학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
제23조 (업무) 대학박물관은 제4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그 이용 2. 교육과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 3. 학예직 지방자의 교육 및 연수지도 4. 박물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5.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4조 (지도·감독) ① 대학박물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에 의해 당해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대학박물관은 매장문화재의 위탁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을 통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도진법 제33조 * 등록박물관의 우대
제25조 (대학박물관협회) ① 대학박물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학박물관의 정보·자료의 교환 및 사무협조,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연구, 종사자의 자질향상,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의 업무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박물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p>⑤ 문화체육부장관이 제①항·제②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p># 법 제10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관리운영</p> <p>제30조 (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수이상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특수성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2월 이상 계속하여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법 제11조</p>
<p>제31조 (폐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 법 제17조</p>
<p>제32조 (장부의 비치)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 법 제13조</p>
<p>제33조 (자료의 관리) ①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서식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한다.</p> <p>② 기부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는 기부자의 명예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할 수 있다.</p>	

<p>제34조 (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 대하여 보존처리·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법 제21조
<p>제35조 (부대시설의 운영)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설립목적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부대시설의 허용범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p>	
<p>제36조 (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p> <p>③ 모든 수송기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수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 법 제20조
<p>제37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9조(동법 제5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람료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 법 제12조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지 도 감 독</p> <p>제38조 (지도·조언)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지도나 조사·연구를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 법 제19조
<p>제39조 (시정 및 정관명령)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나 설립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0조 제②항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①항(제2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한다) 및 제37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p>	# 법 제14조

<p>제40조 (등록취소)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취소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6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한 때 5. 제3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정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하는 때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p>	<p># 법 제15조</p>
<p>제41조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8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명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법 제16조</p>
<p>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박물관협회·미술관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 법 제26조 *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위임</p>
<p>제43조 (명칭의 사용금지과 과태료)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박물관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②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p>	<p># 법 제18조 # 법 제27조</p>

<p>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⑥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장 심의·자문·협력기구</p> <p>제4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① 박물관과 미술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본정책 2.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3.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4.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운영 및 시설의 확충 5. 학예사의 자격 심사와 양성 및 연수계획의 수립 6. 기금의 조성계획 7.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8. 기금의 관리·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기타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p>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도진법 제8장 '도서관협력망' # 도진법 제10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p>
<p>제45조 (자문)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6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③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제①항의 각 호 사업 2. 제13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국가매장문화재의 관리와 위탁관리 3. 기타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p>④ 제①항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미술관·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가 특수한 분야에 해당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 법 제23조</p>

<p>제46조 (박물관·미술관협력망) ① 정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적인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상호대여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p>②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법 제22조</p>
<p>제47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서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p>	<p># 도진법 제7조</p>
<p>제48조 (협회)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및 사무협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의 교류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공공이익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박물관협회와 미술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법 제24조</p> <p># 도진법 14조 1</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7. 	